

오피니언

데스크 시각

박치경



우리나라 사람들은 유난히 '00의 해'를 좋아한다. 올림피아나 월드컵 같은 대형 이벤트는 물론이요, 총선이나 대선 등 큰 정치 이슈가 걸려있는 해라면 더 생각이 돈다. 우리 민중성이 그만큼 역동적인 탓일 게다.

를 맞았다. '아름다운 경치는 오래가지 않는다'라는 말처럼 어느덧 MB는 인기 후반에 접어들었다. MB 취임 이래 '대한민국 호'는 풍랑의 연속이었다. 극심한 이념과 계층의 갈등 때문에 국민의 마음은 어지러웠다. 2010년 말에는 남북 간에 포탄이 난무하는 바람에 엄존하는 대한민국의

'2011 징검다리' 잘 건너라

안보 리스크를 국제사회에 증명하는 아픔도 겪었다.

MB는 그동안의 경제회복을 토대로 올 한 해는 국민통합과 남북관계 진전이라는 숙제를 풀어야 한다. 북한의 연평도 포격은 남북 모두에게 '전쟁은 파멸'이라는 전 주곡을 들려 주었다. 강력한 국방, 투철한 안보도 필수지만 전쟁보다는 평화와 훨씬 가치있고 서로 남는 선택이라는 것을 연평도 포격을 통해 남북 모두 재확인했을

큰 소용돌이 앞둔 한 해

국가나 지역 모두 큰 일을 앞두고 주도면밀하게 준비하고 조심스럽게 건너야 할 '징검다리'가 바로 2011년이다. 우선 이명박 대통령(MB)이 집권 4년차

터다. MB는 2011년을 대반전의 해로 삼아 유종의 미를 준비해야만 퇴임 시 회한을 줄일 수 있다.

한나라당과 민주당 등 정당들도 올해 심기일전하지 않으면 안 된다. MB집권 이후 한나라당은 '부자당'이라는 시각과 당내 분열, 남북갈등까지 겹쳐 밑바닥 평은 그다지 좋지 않다. 다시 한 번 정권을 맡겨달라고 손을 내밀기 전, 과연 얼마나 공감 있는 정책과 헌신으로 국민에게 다가갔는지 자문자답해볼 일이다.

수권정당으로 거듭나겠다는 민주당은 미더운가? 호남 터울을 벗어나도 거리낌 없이 지지받을 수 있는 정책과 비전, 인물

민들이 비상한 각오로 힘을 모으지 않는다면 내년 5월 개막 후 큰 자괴감에 빠질 수도 있다.

두 번째 맞는 국제자동차경주대회(F1)도 올해가 성공 개최의 분수령이다. 지난해는 첫 대회라는 이유로 울퉁불퉁했어도 그럭저럭 넘어갔다. 사실상 올 대회에서 전남도의 역량이 판가름나는 만큼 면밀하게 대비하지 않으면 곤경을 모면하기 어렵다.

경쟁력 높이기 분수령

2011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건설사업도 올해부터는 가속도를 내야 한다. 도청별만 보진 논란으로 2년여 발이 묶여있던 문화전당 건설이 활기를 띠지 못한다면 내년 총선, 대선의 회오리에 말려 또다시 표류할 가능성이 크다.

광주와 전남도의 '공항 갈등'을 비롯한 각종 개발현안 역시 지금까지의 지지부진에서 헤어나지 못하면 성과는 기대 어렵다. 전북은 새만금프로젝트 내부 개발 원년인 올해 탄탄한 도약대를 다져야만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다. 2011년, 국가와 지역사회 모두 정신 똑바로 차려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사회부장) unipark@kwangju.co.kr

시설

최악의 지방재정, 정부 이제 방관은 안 된다

광주와 전남지역 자치단체의 재정 건전성이 최악의 위기 상황이라고 한다. 일부 지자체의 경우 올해도 공무원 인건비를 예산에 반영하지 못하거나 기초 생활수급자 등을 위한 사회복지비를 확보하지 못하는 등 '마이너스 재정구조'가 고착화 되고 있다는 것이다.

광주시 동구는 올해 직원 인건비 390억원 중 36억4000만원을, 남구 역시 420억원 중 140억원을 확보하지 못했으며 광산구도 13억원을 마련하지 못한 상태다. 또한 서구는 사회복지비 60억원, 북구도 32억원의 복지 예산을 편성하지 못하는 등 재정난이 심화되고 있다.

전남도의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지방세 및 자체 수입으로 인건비를 감당하지 못하는 지자체가 22개 시·군 중 82% 해당하는 18곳에 이른다. 이들 시·군의 재정자립도는 8.6%~10.7%로 전국 최하위 수준이다.

이러한 지자체의 재정 위기는 공무원의 인건비와 사회복지비를 반드시 지급

해야 하는 현실을 고려할 때 주민을 위한 행정서비스 하락 등 지역 발전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지방재정의 악화는 무엇보다 현 정부의 지방 확대와 단체장의 방만한 재정 운용이 직접적 요인이다. 정부가 감세 정책을 추진하는 바람에 지방에 내려보내는 교부금이 크게 줄었고 정부가 맡아야 할 사회복지비 지출을 지방에 떠넘겨 그만큼 부담이 늘어난 것이다.

정부는 먼저 지방재정 위기 시스템을 가동하면서 교부금 지원을 늘리고 사회복지비 지출을 환원시키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지자체는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예산의 심의·평가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하고, 단체장의 홍보 수단으로 전락한 각종 축제와 행사에 대한 대대적인 손질도 필요하다.

지방재정이 파탄난면 결국 그 고통은 주민에게 돌아간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오라가락' 정책 국민 신뢰 하겠는가

정부의 지역 개발정책이 오라가락하고 있다. 정부가 신안 가거도 등 전국 4개 섬을 관광지로 개발하기 위한 '국토 끝섬 관광자원화 사업'이 1년도 채 안돼 사실상 폐기됐다고 한다. 당장 1년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정부의 무능과 무일관성이 그저 놀라울 뿐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해 1월 가거도를 비롯한 백령도, 마라도, 독도 등이 포함된 '4대 끝섬'의 자연생태자원을 활용해 관광지 개발하겠다고 발표했다. 오는 2014년까지 한 섬에 연간 100억 원씩 총 400억 원을 투입해 경쟁력 있는 자립형 섬으로 개발하겠다는 장밋빛 정책을 국민들에게 선보인 것이다.

하지만, 문광부는 정작 지난해는 물론 올해도 단 한 푼의 예산도 책정하지 않았다. 4대 끝섬 개발을 사실상 포기한 셈이다. 이는 국민을 기만하고 정부 스스로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행위로 볼 수밖에 없다. 물론 문광부의 주장대로 이들 섬이

면적이 좁아 관광 인프라 구축이 어렵고 지리적으로 관광하기도 적합하지 않은 섬도 있다고 하자. 그렇다만, 이 사업을 구상하는 단계에서 이런 사실을 몰랐다는 것인가. 국토 개발사업이 이렇게 근시안적이고 즉흥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 4대강 사업의 진정성을 국민이 믿으려 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정부의 오라가락 정책 때문에 해당 지자체와 주민들만 멍들게 됐다. 당장 정부 발표만 믿고 가거도를 휴양과 레포츠 기능을 가진 복합 관광지로 육성하기 위해 마스터플랜 수립에 나선던 전남도는 허탈해 하고 있다. 그동안 행정적으로나 재정적으로 낭비만 한 꼴이 된 것이다. 개발 꿈에 부풀었던 주민들의 상실감 역시 이루 말할 수 없다.

문광부는 4개 끝섬 개발 사업을 일괄적으로 취소할 게 아니라 타당성이 있는 곳만이라도 예정대로 시행해야 할 것이다. 신뢰를 잃은 정부는 성공할 수 없다.

기고



안홍준

지자체 경제기반은 일반 국민들의 살림살이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곧 국민 경제의 전부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지자체 경제 현실은 녹록지 않다. 국회 예산처가 발간한 '지자체 재정난 원인과 대책'이라는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09년 지자체 통합재정수지 적자는 7조1000억 원에 이른다.

특히 지자체 재정이 악화되면서 지방세 수입으로 인건비조차 해결하지 못하는 지자체가 속출하고 있으며 이들의 인건비 부족분은 8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남의 경우 공무원 인건비조차 해결할 수 없는 지자체가 9곳에 달해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재정난이 가장 심각

를 비교하면, 울진군의 경우, 총 예산이 4393억이며, 이 중 원전 건설운영으로 파생되는 지원금 및 지방세가 1007억 원이다. 이는 울진군 전체 예산의 22.9%에 달하는 규모이다.

반면, 영덕군의 경우, 총 예산은 3238억이며, 이 중 특별회계는 223억 원 규모로 울진군의 18.5%에 불과하다.

주지하다시피 원전산업은 과거에 '기피시설'이라는 골치 못힌 인식과 함께 애물단치 취급을 받아왔다. 히로시마 원폭투하와 체르노빌 원전사고로부터 기인한 부정적 인식은 '원자폭탄과 방사성'이라는 막연한 공포로부터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우려와 달리 3% 정도의

친환경 원자력에너지가 경쟁력이다

한 것으로 확인됐다.

1991년 본격적인 지방자치제를 실시하면서 예견됐던 '지자체 부도설'도 최근 성남시를 비롯한 대전시 동구청 등 전국의 우수한 지자체가 파산을 선언하거나 위기에 봉착하면서 현실로 나타났다. 남의 일처럼 여겨지던 '지자체 파산 사태'가 현실로 나타나면서 국민들은 '지속가능한 산업시설'에 주목하기 시작했다.

이 중 대표적인 것이 '원자력에너지 산업'이다. 원전산업이 지자체들로부터 '효자산업'으로 주목받는 가장 큰 요인은 ▲지속가능한 친환경·생산적 산업 ▲인구의 안정적 증가 기반 제공 ▲지방재정의 안정적 확충 때문이다.

이 같은 효과는 현재 원전이 건설·가동되는 지자체와 그렇지 않은 지자체와의 재정 규모 비교에서 확연하게 확인된다.

실제 유사한 경제적 기반을 가지고 있는 울진군(원전 6기 보유, 2기 건설 중)과 영덕군(원전 미보유)의 재정규모

를 비교하면, 울진군의 경우, 총 예산이 4393억이며, 이 중 원전 건설운영으로 파생되는 지원금 및 지방세가 1007억 원이다. 이는 울진군 전체 예산의 22.9%에 달하는 규모이다. 반면, 영덕군의 경우, 총 예산은 3238억이며, 이 중 특별회계는 223억 원 규모로 울진군의 18.5%에 불과하다. 주지하다시피 원전산업은 과거에 '기피시설'이라는 골치 못힌 인식과 함께 애물단치 취급을 받아왔다. 히로시마 원폭투하와 체르노빌 원전사고로부터 기인한 부정적 인식은 '원자폭탄과 방사성'이라는 막연한 공포로부터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우려와 달리 3% 정도의

이제 원전산업은 막연한 공포로부터 비롯된 '기피시설'이 아니라, 실질적인 지역경제를 배가시키고,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효자산업'으로 나아가 '지속가능한 친환경산업'으로 각광받고 있다. 전국의 지자체가 원전산업에 주목하고 앞다투어 유치선점에 뛰어드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

《한국원자력산업회의 사무총장》

임산부에 유행 제대혈 보관 정확한 지침 만들어야

임산부들 사이에서 제대혈 보관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 신생아의 탯줄을 보관했다가 아이가 자라면서 백혈병 등 난치성 질병이 발생하면 보관해둔 제대혈로 치료할 수 있다는 말 때문이다.

이 때문에 최근 탯줄을 보관해주는 산부인과에는 부유층 임산부들이 넘쳐나고, 이에 제대혈만 따로 보관해주는 제대혈 보관 은행까지 생겨났다.

최근 신문 보도에 따르면 이처럼 보관된 제대혈이 국내 17개 업체에 27만 개에 이르 고 시장 규모가 2000억 원이나 된다고 한다.

하지만 보관중에 제대혈 세포 상당수가 죽어 그 효과가 아직 믿을 수 있는 단계가 아니라는 말도 많다.

정부는 이 같은 문제를 그저 개인의 선택에 맡길 것이 아니라 의학적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규명하고 정확한 지침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그лай만 효과도 의문시되는 일에 산모들이 엉뚱한 돈만 날리고, 제대혈 보관은행과 일부 산부인과가 배만 불리고 있는 일을 막을 수 있기를 바란다.

▲홍에서·광주시 광산구 두정동



박행순



새해에는

저무는 해 늦은 밤에 부모님이 생각나서 컴퓨터에 저장된 사진을 열어봅니다. 엄마 어깨에 기대어 잠드신 9旬의 아버지 사무엘 울만의 '청춘'을 즐겨 읽으시고 아직도 이사 가는 곳마다 낡은 세계지도들 벽에 거시는 꿈 많은 아버지

이제는 두 분 만 남아서 서로에게 의지하고 지팡이에 의지하고 가만히 저물어 가십니다.

아버지는 어떤 꿈을 꾸시는지 세계 지도 속의 어디를 향하시는지 알 길 없지만

어머니는 사진 밖의 나를 향해 희미하지만 애써 웃어줍니다.

새해에는 두 분을 사랑한다고 고맙다고 미안하다고 마음으로만 아니라 말로써 말하겠습니다.

〈전남대 약대 교수·(사)국제과학문화협회 대표〉

광주일보는 '오피니언'면 기고중 분기별 최우수작을 선정해 '은펜상'을 수여 합니다. 은펜칼립은 이들 수상자들의 모임인 '은펜클럽' 회원들의 칼럼을 쓰는 코너입니다.

취업박람회 사주관 열풍이 아니 안타까워

요즘 취업난이 심각하다 보니 대학과 기업, 공공기관 등 여기저기서 취업박람회가 자주 열린다. 청년 실업자들이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구름처럼 몰려들어 정보 하나라도 더 얻기 위해 동분서주하는 모습을 보면 안타깝기만 하다.

였다. 처음에는 워낙 많은 사람이 모여있기에 대기업에서 취업 설명회를 하는 줄 알았다. 하지만 가까이 가보니 역술인이 점을 보고 있었다.

점쟁이는 생년월일과 태어난 시각을 물어 보고 관상을 보며 사주책을 죽 훑어 보더니 취업시기와 진로, 취업 운에 대해 설명했다. 젊은이들이 사주에 의지해서라도 취업을 하고 싶어할 정도로 직장 구하기가 하늘에 별 따기만큼 어려운 요즘 현실이 안타깝기만 하다.

▲이수연·광주시 광산구 요기동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 생활의 경험 등 어떤 내용의 원고나 사진, 만화, 만평도 환영합니다. 채택된 원고는 고료를 지급합니다.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28/팩스 062-222-4918/e메일 opinion@kwangju.co.kr

인터넷에서 만나는 광주일보

www.kwangju.co.kr

無等鼓

기원전 7세기경 1000여 개의 도시국가로 구성된 그리스는 '중(重)보병제'라는 독특한 전법을 개발했다. 갑옷과 투구, 청동제 정장이반이 등을 착용하고, 지름 90cm 크기의 원형방패와 2.4m 길이의 창으로 무장한 중보병들은 사각형의 밀집대형을 이뤄 싸움으로써 평지에서 막강한 전투력을 발휘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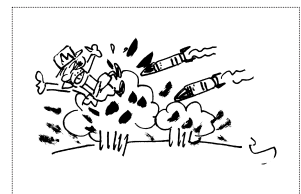
투구판을 지닌 시만들로 구성된 중보병들은 다른 도시국가와 마찬가지로 수확이 생기면 수확량이 지난 뒤 서로 약속한 장소에 집결, 평탄한 농지에서 한나절 동안 싸우는 식으로 승부를 가렸다. 그러나 당시 융성했던 대다수 도시국가들은 중보병제에 대한 애착을 버리지 못함으로

과의 대결에서 압도적으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도록 했다.

마케도니아 중보병은 창을 세우고 행진할 때 마치 숲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임으로써 전투가 시작되기 전에 심리적으로 적을 제압했다. 무적전법에 쫓겨 '순박한' 그리스 중보병들은 평지에서 막강한 전투력을 발휘했다. 투구판을 지닌 시만들로 구성된 중보병들은 다른 도시국가와 마찬가지로 수확이 생기면 수확량이 지난 뒤 서로 약속한 장소에 집결, 평탄한 농지에서 한나절 동안 싸우는 식으로 승부를 가렸다. 그러나 당시 융성했던 대다수 도시국가들은 중보병제에 대한 애착을 버리지 못함으로

방공격을 '비겁한 행동'으로 여겼다. 최근 북한의 치명적인 '비대칭 전력' 공격에 대비, 한국이 미국과 공조해 전쟁 역지력을 키워야 한다는 유럽간연연구소의 제안이 나왔다. 핵무기나 생화학무기, 특수부대 등 적의 약점을

비대칭전력



공격해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비대칭 전력 공격에 맞서기 위해서는 지상 정밀유도무기나 전투기를 이용한 공중 폭격을 고려해야 한다는 얘기가. 전쟁이란 새로운 전법에 잘 적응하는 측이 승리를 얻어주지 마라이다. 한반도는 정전(停戰)상태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홍형기 정경부차장redplane@

Table with publication information for Kwangju Ilbo, including contact details and subscription rates.